

금융 관행의 개선

김성수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머리말

금융 부문은 일반적으로 실물 부문에 비해 커다란 외부 효과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외부성과 공공성은 정부의 개입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이용되며, 실제로 우리의 금융 기관은 한국은행법, 은행법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고객 관계가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제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조건 하에서 다기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 기관과 고객간의 관계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문화된 규정이 상정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도 금융 기관과 고객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문화되지 않은 행동 규범이 존재하게 될텐데, 이것이 정착되어 금융 관행으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 관행 그 자체는 명문화된 규

정에 충실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금융 기관의 금융 중개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 관행은 대체로 명문화된 규정을 위배하고 금융 중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문제 의식 하에서 최근 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은행의 금융 관행 개선을 개혁 과제로 삼기도 할 정도이다.

본 고에서는 은행의 금융 관행 사례와 이런 금융 관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금융 관행의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 관행의 사례

1) 꺾기

금융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꺾기'이다. 꺾기는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함과 동시에 대출의

일부를 예치하는 대출 상의 금융 관행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보상 예금 또는 양건 예금이라고도 한다. 보상 예금은 은행의 대출 위험과 금리를 차입자가 예금함으로써 일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는 대출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본질적으로 금융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보상 예금은 관행화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의 꺾기가 언론과 감독 당국에서 비판하듯이 불건전 금융 관행인 것만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 규제와 여신 규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꺾기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그 동안의 금리 규제로 은행 대출 이자율이 투자의 기대 수익률보다 크게 낮고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는 거의 무한정인데 반하여, 예금 금리의 규제와 통화 당국의 여신 규제는 은행 대출 공급을 제약하여 대출 자금의 초과 수요라는 만성적인 구조를 지속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대출 신청자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차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출의 일부를 예금으로 동결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꺾기는 대출금의 종류, 고객과의 관계 및 시중의 자금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먼저 대출금의 차이에 따라 꺾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꺾기의 대상이 되는 대출은 주로 은행에 전액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대출이다. 이 가운데서도 적금 대출과 급부금은 약정에 의해 예금 취급시에 보장된 대출이므로 꺾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꺾기의 대상은 거의 일반 자금 대출로 한정되며, 당좌 대출의 경우 약정 한도를 넘은 일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꺾기는 고객과의 관계 및 시중의 자금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이 달리 결정된다. 즉, 평소 여유 자금을 은행에 맡겨두고 당좌 차월 한도도 여유를 두고 있는 기업의 대출에 있어서는 꺾기의 정도가 작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수록 은행의 우월적인 위치가 커지므로 꺾기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시중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수록 꺾기의 비율이 높아지리란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은행은 어떤 형태의 예금으로 어느 정도 꺾는지를 살펴보자. 꺾기의 수단으로는 은행의 모든 예금이 이용되나,

대출금에 따라 격기 수단도 다르다. 1년 만기 일반 대출의 경우 정기 예·적금, 저축 예금, CD가, 단기 자금의 경우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주로 이용된다. 사모채와 회사채 인수는 거의 CD로 격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CD의 발행 한도가 9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됨으로써 CD를 통한 격기 행태가 심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격기의 비율은 고객과의 관계와 시중 자금 사정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 금리로는 1일간 콜금리와 3년 만기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이용된다고 한다.

격기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 지침」 제3조(우월적 지위의 만용 배제) 제1항은 금융 기관이 '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예·적금의 취급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의 자유로운 해약·인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격기는 금융 질서의 혼란,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증대 및 효율적 통화 관리의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감독원은 격기에 대한 규제에 있어 은행에 시정 조치만을 내릴 뿐, 문책 사유로 이

용하지는 않았다. 이는 격기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대출의 공급을 축소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

은행의 대출 관행에 있어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용 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이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축적된 기업에 추가적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담보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대출을 꿈꿀 수 없는 것이 현행 금융 시장 사정이다.

또한 은행 내부로 들어가보면 구조적으로 담보를 중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직급별 대출 전결 한도를 살펴보면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에 현저한 차별이 있다. 대체로 시중 은행의 경우 영업점장의 전결 한도는 담보 대출에 비해 신용 대출이 1/3~1/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은행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행에 의존하게 된 데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은행의 역

할이다. 60년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은 저축의 동원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동원된 저축의 배분, 즉 신용의 배분은 주로 정부의 산업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은행의 신용 배분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은 대출 채권의 부실화에 대비한 부동산 담보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이후 80년대 들어 정책 금융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타성화된 담보 관행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웠다.

둘째, 자금 시장의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를 지적할 수 있다. 담보를 갖고 있는 차입 신청자가 줄을 서 있는 상황 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신용 대출이라는 모험을 굳이 하려 할 은행은 없을 것이다.

셋째, 은행의 보수적 경영 풍토와 신용 평가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여수신 업무가 모두 기표에 의해 처리되며, 사고 발생시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가가 책임 여부를 따지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은행의 직무 풍토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수적인 직무 풍토 하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은 대출

결정 상의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대출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분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즉, 채권 보전이 확실하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된다. 그러나 신용 대출의 경우 직무 상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은행의 대출이 대체로 장기의 설비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사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의 미비는 신용 대출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은행은 대출시에 담보를 확보하고도 별도로 담보용 백지 어음(또는 견질 어음이라고도 함)이나 당좌 수표를 징구하는 관행이 있다. 본래의 취지는 차입자가 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물건의 처분 등 법적 절차에 앞서 은행이 채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백지 수표가 실제 채권 확보를 위해 사용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금융 기관이 보관 중인 백지 어음을 교환에 회부할 경우,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도산이 유발되고 금융 기관간의 여신 전가의 우려가 있다. 또한 백지 당좌 수표의 경우 수표 기

능의 변칙적인 이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감독원은 백지 수표의 징구 억제와 백지 어음의 보충권 남용을 지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은행은 내규 상으로는 여전히 백지 어음과 수표를 징구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도 증서 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백지 수표나 어음을 요구하고 있다.

3) 당좌 대월 상의 관행

은행의 당좌 계정은 기업에게 지급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또한 자본 시장이 어려울 때 당좌 대월을 통하여 기업에게 신용을 제공해준다. 자본 시장에서 단기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당좌 대월 상의 도구로서 일시대와 타입대를 들 수 있다. 일시대는 일시 당좌 대월을 줄인 말로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최종적인 대출 형태이다. 이 당좌 대월은 약정된 일정 기간과 한도 내에서 자동적으로 단기 대출이 보장되는 대기성 대출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운전 자금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대출 제도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규모나 기간을 사전에 알 수 없고 약정 한도 내에서는 자동적으로 자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준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은행은 재무 구조, 신용 상태, 거래 관계 등을 심사하여 허용해주며, 대월 한도는 원칙적으로 차주의 자기 자본의 2 배를 넘을 수 없다.

타입대는 일시대로도 해결되지 않는 결제 자금 조달의 마지막 방법이다. 타입대는 타점권 입금에 의한 대출을 줄인 말로, 타점권(약속 어음, 당좌 수표 등)을 당좌 예금에 입금한 후 당일로 보수를 발행하거나 입금 후 당일로 인출하여(실질적으로 대출 증가), 타행으로부터 영업점 앞으로 교환 회부된 당좌 교환의 결제 자금으로 충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일시대와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는 1 일짜리 당좌 대월이 발생하는 것과 같으나, 당좌 대월 한도의 확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시대는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총대출 한도의 적용을 받으나, 타입대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업의 결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은행은 일시대보다는 타입대를 선호

한다. 그 이유는 타입대의 경우 타행의 당좌 수표를 받음으로써 일단 다음날 교환 처리가 되고, 타점 당좌 수료 자체가 담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 관행의 발생 배경

우리나라 은행의 꺾기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의 금융 관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이 정부 주도에 의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은 부족한 재원의 조달, 즉 저축의 동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은행의 경우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금고의 폐해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서 국영화되어 정부의 지시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80년대 들어 은행 지분은 민영화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은행의 주인이 없는 실정이며, 은행의 경영 역시 기존의 관성화된 금융 관행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장 기능에 맡기는 금융에 대한 인식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 산업은 칸막이식으로 분리하여 운영되어왔고 제반 영업은 법규나 업무 지침에 의해 일일이 규제·허용되어왔다. 따라서 이업종 금융 기관간의 경쟁은 제한되어왔고, 또한 개별 금융 기관도 자신의 업태 안에서 안주하여 규제를 회피하여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혁신적인 활동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은 손쉬운 영업 관행을 낳게 되었다. 또한 통화 당국의 금리 규제 하에서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 수요가 존재하게 되어, 신용의 할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용의 할당 과정에서도 은행은 배제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미 선정된 차입 신청자에게 부동산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소극적으로나마 수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실세 금리의 보전을 위하여 은행은 기업에게 대출의 일부를 예치시키도록 함으로써 미시적으로나마 시장 기능을 대행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자본 시장이 미비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던 기업의 과도한 차입 의존 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화학 공업 부

문의 단기간 급성장을 위해선, 외부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 비율은 금융 비용 부담을 높이고 금리 인상을 유발한다.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금리 규제는 또 다시 외부 차입 수요를 늘리게 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꺾거나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금융 관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이제 금융 관행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꺾기의 경우는 통화 당국의 금리 및 여신 규제를 회피한 금융 기관의 이익 극대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꺾기를 통하여 수신고를 늘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은행의 수신 극대화 및 영업점장의 영업력 극대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 백지 어음 관행은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응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꺾기와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금융 관행은 금융이 억압된 상태에서 금융 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요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아무리 강하여도 시장의 힘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 기관 등 개별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금융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꺾기 비율의 요구는 기업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 들어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 출범한 금융개혁위원회는 현재 불합리한 금융 시장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관행은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소는 향후에도 계속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필요한 금융 시장 개입의 축소, 금융·금리 자율화의 진전, 금융 시장의 개방 등을 통하여 금융 시장의 여건이 보다 경쟁적이 되도록 하고, 자금의 초과 수요도 진정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